

기술자본 담론과 고등무용교육의 미래*

정 옥 희**

I. 4차 산업혁명: 또 하나의 혼란 앞에서

II. 기술자본 담론과 대학교육

III. 무용과의 위기 담론

IV. 무용과의 위기에 대한 재고찰

V. 제 언

참고문헌

Abstract

I. 4차 산업혁명: 또 하나의 혼란 앞에서

한국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¹⁾은 사회적 현상이자 담론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형체를 부여한 이 용어는 한국에서 유독 빠르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6년 1월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정책과 추진 기구를 제시하고, 기업, 연구소, NGO, 언론은 앞 다투어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전망하고 생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²⁾ 각종 구호와 청사진으로 점철된 4차 산업혁명은 “한국 사회의 적폐와 구질구질한 현실을 돌파하는 혁신의 수사로 등극”³⁾하면서 수천 억대의 정부 사업으로 실체화되는 한편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학계에선 각종 토론회, 공청회, 연구물, 서적, 방송 및 언론보도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무용학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⁴⁾ 하지만 무용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품는 기대와 두려움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도 한국 사회에는 정보화, 융복합, 지식기반사회, 글로벌 경쟁, 초연결성, 초복잡성, 창조경제, 통섭, 학제성 등 다양한 의

* 본 논문은 2018년 5월 26일에 열린 한국무용예술학회 제23차 국내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okheejeong1@gmail.com

1)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제시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초연결사회가 대두되면서 사회문화 전반에 급진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2) 김소영에 따르면 2017년 6월 한 달 동안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이 거의 매일 개최되었다고 한다. 2018년 4월 26일 기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제목(전방일치)으로 검색결과 국가자료종합목록에 총 267권이 검색되며, 출간예정 책만 하더라도 60권에 달한다(2018. 4. 26. 검색). 김소영(2017), 4차 산업혁명, 실체는 무엇인가?,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손화철 외, pp.10-27.

3) 이광석(2017), 4차산업혁명과 시민 테크놀로지적 전망,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p.40.

4) 2017년부터 무용역사기록학회, 대한무용학회,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예술교육학회, 한국무용협회, 그리고 한국무용예술학회가 학술대회, 월례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다루었다.

제가 등장했으며, 무용계 역시 부지런하게 소화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의제를 쫓는데서 오는 중첩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무용계, 무용학, 그리고 무용과의 좌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볼 때 무용은 20세기 초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 편입되었지만 이후로도 예술이자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하는 신생의 학문이자 변방의 학제였다.⁵⁾ 국내의 경우 해방 이후 개인무용연구소에서 대학 무용과로 이행되면서 무용과가 무용계의 주도권을 획득했지만,⁶⁾ 2005년에 시작된 정부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통폐합되거나 축소되기 시작하며 소위 ‘무용과의 위기’ 프레임이 형성되었다.

무용과의 위기가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학무용교육의 개선 방향 및 생존 전략은 꾸준히 논의되었다. 아니, 이미 너무나 많은 진단과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다룰 내용이 없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에는 또 하나의 키워드로 소비하기는 쉽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과 원론적인 해결책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요인을 새롭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무용과의 위기 프레임이 고질화된 상황 자체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에 무용과는 이렇게 대응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하여 오늘날 대학이 처한 상황은 무엇이며, 무용과가 이에 반응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연구자가 4차 산업혁명을 비판적이고 맥락화 된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필연적으로 도래할 미래나 이미 현실화 된 삶의 조건으로 파악하는 이들은 이를 기회나 위기로 해석하고 활용 전략을 짜지만, 이를 사회구성원을 동요케 하고 현혹시키지만 실체가 없는 사회 현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다양한 주체가 지닌 욕망과 갈등을 들여다본다. 후자의 관점을 취하는 본 연구자는 4차 산업혁명을 무용과의 기회나 위기로 즉각 진단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오늘날 대학이 놓인 기술자본 담론 속에서 무용과를 파악한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일련의 사회적 의제에 수동적으로 혹은 맹신적으로 끌려가기 쉬운 무용학 및 무용과의 위치에 대해 반성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무용과’라는 키워드를 ‘기술자본 담론’과 ‘고등무용교육’의 프레임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무용과의 위기가 대학 안의 상대적 주변화를 상징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종합대학(university) 체제를 뒤흔들고 있기에 대학 무용과 너머까지 확장된 고등무용교육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4차 산업혁명만으로 대학의 위기를 논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대학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규제와 관리, 산업계의 요구, 학령인구 감소, 세계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으며, 무용과 역시 복잡하고도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무용과의 미래를 논함에 있어서 우선 대학의 현 상황을 거시적이고도 총체적으로 살피고, 무용과의 패러다임을 재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대학교육 및 무용과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맥락화한다. II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신자유주의를 각각 기술담론과 자본담론으로 확장하고, 대학교

5) Michell Clyaton, Mark Franko, Nadine George-Graves, André Lepecki, Susan Manning, Janice Ross, Rebecca Schneider, Noémi Solomon, Stefanie Miller(2013), Inside/Beside Dance Studies: A Conversation Mellon Dance Studies in/and the Humanities, *Dance Research Journal* 45(3), p.21.

6) 윤지현(2017), 1960, 1970년대 한국 무용교육 제도의 근대적 이행: 개인무용연구소에서 대학 무용과로, 『무용예술학연구』 67(5), pp.1-16.

육이 놓인 상황을 타진한다. III장에서는 무용과의 위기에 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한다. 이를 기반으로 IV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무용과’의 문제를 ‘대학의 기술자본담론과 고등무용교육’의 문제로 확장하고, 무용과의 위기에 대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기술자본 담론과 대학교육

1. 4차 산업혁명이 대학의 위기를 초래했는가?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혁신 시대로 정의된다.⁷⁾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어 산업구조 근본이 변화하는 것으로 지능정보기술이 변화동인”⁸⁾이라고 정의했고, 2018년 미래창조과학부의 후속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선 “ICT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⁹⁾이라 정의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부각시키는 4차 산업혁명은 “지능”과 “정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산업 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사회 및 삶의 질까지 확장하려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전폭적인 정책과 자원이 집중되는 것에 비하여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불확실하다. 일련의 학자들은 1, 2차 산업혁명이 역사적 현상임에 비해 3, 4차 산업혁명은 각각 2012년과 2016년에 발표된 미래학자의 예측에 불과하다고 본다.¹⁰⁾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유독 회자되는데다 2016년 3월 이세돌-알파고의 대국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유행했다는 점에서 유행어(buzzword)로 보기도 한다.¹¹⁾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는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한다. “미래의 먹거리”¹²⁾이자 “기회”¹³⁾라고 기대되는 한편, “유령”¹⁴⁾, “과도한 열풍, 거짓말”¹⁵⁾, “창조경제 2기”¹⁶⁾, “정치적 유행어”¹⁷⁾, 혹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키워드”¹⁸⁾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실체를 가진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욕망과 관점이 반영된 것임을 드러낸다. 나아가 김소영(2017)은 ‘4차’라 규정할 수 없고, ‘산업’만 구별할 수 없으며, ‘혁명’처럼 급진적인 변화도 아니라는 점에서 용어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이준웅(2017)은 이 용어가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합의수준은 낮은 플레이스홀더(placeholder)에 불과하다고 평가

7)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기계, 2차 산업혁명은 조립라인과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지식정보 혁명, 4차 산업혁명은 AI, IoT, 초지능 혁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김성열(2017), p.5.

8) 미래창조과학부(2016),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미래창조과학부), p.2.

9) 강준모(2018),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국가전략,” 『4차 산업혁명 전략의 새로운 지평: 미래 국가전략의 모색』,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집, p.47.

10) 박진완(2017), 예술전공의 구조조정과 융합교육시스템의 개편 과정에 관한 고찰, 한국예술연구소 201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58.

11) 맹미선(2017),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 담론의 확산: 과학기술 유행어의 수사적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2) 문재인 대선후보의 연설 장면. 연합뉴스(2017-02-03), ‘차기주자 앞다퉀 “4차 산업혁명, 미래 먹거리,”’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03004300038/>, 2018. 4. 26.>.

13) 양성길 외(2018), 『4차 산업혁명 지급이 기회다!』(서울: 한국경제신문); 이재홍(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기회』(서울: 메디치미디어).

14) 홍성욱 외(2017),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서울: 휴머니스트).

15) 손화철 외(2017),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16) 임태훈(2017), 이것은 창조경제 2기입니까?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pp.97-110.

17) 홍성욱(2017), 왜 ‘4차 산업혁명론’이 문제인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홍성욱 외(서울: 휴머니스트), p.31.

18) 박진완(2017), p.58.

했다.¹⁹⁾ 이에 4차 산업혁명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기술적 용어(descriptive term)가 아니라 전지구적 ‘초연결성’을 각국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수단적 용어(instrumental term)”라 할 수 있다.²⁰⁾

용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의 열풍은 기술 발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 급진적이고도 근본적인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 내세우는 ‘초연결성의 전면화’는 새로운 산업과 발전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두려움과 혼란도 내포하고 있다. 1784년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1차 산업혁명이 발생했을 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으로 신기술에 저항했듯, 4차 산업혁명 역시 사회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와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그 변화의 속도, 범위, 깊이에 있어 이전의 산업혁명들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변화의 양상은 예측불가능 할 뿐더러 선두 그룹과 후발 주자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리라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이 지닌 예측불가능성과 불안정성은 고용 불안과 대규모 실업을 의미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의 일자리」(2016)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유발한 사회-경제학적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업무환경의 변화 및 업무의 유연성(44%)을 꼽았으며,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200만 개에 불과할 것이라 전망했다. 즉 고용불안은 4차 산업혁명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Frey와 Osborne은 미국 일자리 중 47%는 20년 내에 자동화될 것이라 전망했고, 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현재 수행되는 업무의 70.6%가 로봇으로 대체되어 2025년이면 전체 취업자의 70% 가량이 실업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측했다.²¹⁾

문제는 미래의 일자리를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 및 개인의 삶에 막심한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201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65%는 대학 졸업 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WEF의 전망에서 보듯 직업의 불안정성은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는 인공지능이 실업(76.5%)과 빈부격차의 심화(85.3%)을 가져오리라 예측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²²⁾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체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핵심기술에 대한 지배력이 소수에게 고도로 집중되면 정보와 권력의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사회적 불안요소를 가중한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불확실성과 비동시성의 증가는 교육 제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구조적으로 보수적인 초중등교육에 비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대학교육에선 새로운 인재상과 교육내용과 방법이 대두되며 전면적인 반성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은 취업 직전의 단계이지만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중장기적 설계가 어려울 뿐더러 인터넷, MOOC,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대학 자체가 대폭 축소하거나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연일 등장하고 있다. 무용과의 미래

19) 김소영(2017), pp.16-18; 이준웅(2017), ‘4차 산업혁명’ 구호는 버려야, 『경향신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5071542001&code=990100, 2018. 4. 26>.

20) 장은수(2017), 콘텐츠 생태계와 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pp.114-116.

21) Frey, C. B. and Osborne, M. A.(2017),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 pp.254-280; 박가열 외(2016),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pp.1-123.

2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미디어이슈』 3(4), 언론진흥재단미디어연구센터(2017), 20-50대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이광석(2017), pp.44-45, 재인용).

를 전망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선 우선 대학 자체의 변화와 존립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대학을, 나아가 무용과를 위협하는 주요인인가? 그렇지 않다. 우선 시기적으로 볼 때 ‘대학의 위기’는 4차 산업혁명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다. 철학자 리오타르(Lyotard)는 근대적 산물인 대학을 사멸해 가는 제도로 규정한 바 있으며, 미래학자 드러커(Drucker)는 1999년도에 이미 2020년이면 현존하는 대학의 80%가 문을 닫게 된다고 예견했다. 국내에서도 ‘대학의 위기’ 담론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²³⁾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역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40년대, 1950년대, 그리고 1980년대 등 여러 시기에 등장하여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⁴⁾ 이는 현재 목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위기가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지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대학의 위기는 4차 산업혁명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다. 미래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 자원 고갈, 환경오염, 기후 변화, 세계화 및 무한 경쟁 등 다양하며, 대학 역시 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의 감소 및 이에 대응하는 정부주도의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토대가 빠르게 붕괴되고 인문학 및 예체능 학과가 통폐합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의 문화격차,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의 재정구조, 그리고 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 및 규제 등 역시 대학의 역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위기, 나아가 무용과의 위기를 4차 산업혁명에 국한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교육방법이나 개편으로 해결되리라 믿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에 대학의 위기를 총체적으로 다룰 틀로서 기술자본의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학의 기술 담론, 자본 담론, 기술자본 담론

대학은 처음에 신학을 중심으로 종교를 섬기는 형태였고, 그다음 근대 대학은 국가를 섬기는 형태였고, 지금은 시장을 섬기는 형태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시장을 섬기는 지금의 형태가 최악으로 간다.²⁵⁾

대학 이념의 변천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중세의 대학이 신학을 바탕으로 성직자나 엘리트 계층을 위한 교양교육이었다면, 20세기 대학은 산업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보다 보편적인 교육 기관이 되었다.²⁶⁾ 또한 분과체제가 확립되면서 학생들이 고전학이 아닌 특정 분야를 배우거나 전공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김혜나(2018)은 근대의 대학이 근대화, 산업화,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추동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모순된 역할을 맡았다고 분석했다.

23) 정희모(2013), 대학 이념의 변화와 인문학의 미래, 『철학탐구』 34, p.171.

24) 홍성욱(2017), pp.31-37 참조.

25) 서보명(2015), 『대학의 몰락』(김창인(2015), 『괴물이 된 대학』(서울: 시대의 창), p.167 재인용).

26) 미국에서는 1862년 모릴 법(Morrill Act)의 통과로 토지증여 대학이 설립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리스, 라틴어 등의 고전학 외에 직능, 공학, 건축 과목을 배울 수 있었다. 1880년에는 하버드 대학이 선택형 교과과정 도입하여 학부생이 특정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으며, 1910년 하버드 대학에 학부전공제도가 실행되었다.

〈표 1〉 대학 이념의 역사적 변천

중 세	근 대	현 재
교양교육	전문가 교육	직업교육
신 학	국 가	시 장
귀족층의 교양교육 교양으로서의 인문학	분과체제 대학의 보편화 산업사회에 맞는 인재 양성	기존 산업질서의 붕괴 신자유주의: 실용성 강조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 강조

참조: 서보명, 2015

한편 21세기의 대학은 전문가교육을 넘어 구체적인 직업교육의 성격으로 전환했다. 대학교육이 더욱 보편화되었으니 치솟는 등록금과 취업 지체의 간극이 커지면서 학생들은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실리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처럼 학생의 구성과 가치관의 변화는 대학의 서열화 및 양극화를 낳았다. 일부 엘리트 대학이 명품화되어 실질적인 교육 내용보다는 상징자본이 된 반면, 나머지 대학들은 교육 과정 자체를 취업을 위해 실용화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대학의 자본화 및 실용화를 이끈 주체가 교육자가 아닌 학생이라는 점이다.

대학 이념의 변화는 특히 기술과 자본에 대한 담론과 궤를 같이한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상징되는 기술-공학 담론과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시장-자본 담론은 대학의 특성을 변화시켰으며, 이들이 밀접하게 결합된 기술자본 담론은 오늘날 대학교육의 정체성에 있어 절대적이다.

가. 기술 담론

교육에 있어 기술 담론이란 기술 발전이 보편교육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관점이다. 미래학자 데이비드 손버그는 인류 역사에서 교육혁명에 기여한 기술혁신으로 표음문자와 인쇄기술로 보았고, 모바일 기술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 예측했다.²⁷⁾ 표음문자가 지식의 형성 및 추상화를 가능케 했다면, 인쇄기술은 지식을 전파시켰다. 16세기 유럽에서 금속활자를 기반으로 발전한 인쇄기술은 개신교를 전파하고 문해력을 높이면서 교육대상을 성직자와 귀족뿐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 확대했다. 또한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강조한 보편교육과 산업혁명의 결합은 대중교육과 기술의 결합을 확산시켰다. 발전된 인쇄술과 유통망, 우편체제,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상을 확장하는 보편교육에 일조해왔다. 나아가 온라인 강의, 방송통신교육, MOOC로 이어지는 대안적 교육은 교육의 높은 비용과 획일화를 해결하고 맞춤형 보편교육을 극대화하는 희망으로 여겨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담론은 그야말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비유되며 자본주의 및 교육과 쉽게 결합했다. 교육의 기술담론은 기술결정론, 즉 기술이 발전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는 관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기술 도입 및 강조는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얻게 된다. 기존 교육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의심은 에듀테크(edutech)를 미래교육의 청사진으로 부각시켰다.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인 에듀테크는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기존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대중화, 교육 효과의 극대화, 교육과 실생활의 결합을 추구한다. 에듀테크를 ICT산업의 성

27) Donaldson et al.(2015), 『전세계 온라인 공개강좌의 충격 MOOC』(서울: 흥릉과학출판사), p.33.

장동력이라 보는 선진국들은 에듀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홍정민(2017)은 에듀테크가 가져 올 변화를 크게 6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에듀테크가 가져 올 교육 혁명

교 사	인공지능으로 대체
학 생	학생이 교사가 되고 교사가 학생이 되는 환경
교 실	현실보다 현실감 있는 가상현실 교실
커리큘럼	국영수 및 암기과목이 아닌 새로운 교과
프로그램	재미있는 교육, 게임 기술과의 접목
학 교	전통적 학교의 종말

출처: 홍정민, 2017

에듀테크의 영향으로 인해 교육산업의 전통적 체제는 파괴될 것이라 전망된다. 지역별, 대상별, 목적별, 방법별로 세분화된 교육 시장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점이다. 온/오프라인의 경계, 공급자/소비자의 경계, 유통의 경계, 프로그램의 경계가 파괴되면서 교육산업, 교육기관의 역할, 그리고 교육의 유통구조가 재편될 것이다.²⁸⁾

대학교육의 기술 담론에서 현재 가장 존재감이 큰 것은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대규모 공개 온라인 수업)이다.²⁹⁾ 뉴욕타임즈가 2012년을 ‘MOOC의 해’로 선정할 정도로 MOOC는 대학교육의 소멸을 가져올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쓰나미에 비유된 MOOC의 파괴력은 대학의 학점 독점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 하면서 산업화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원동력이라 여겨졌다.³⁰⁾ 학습효과와 미비, 높은 중도탈락율, 기술 및 제도적 문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MOOC에 대한 높은 기대는 대학교육을 둘러싼 기술 담론을 그대로 드러낸다.

MOOC가 대학교육을 대체할 것이라 보는 입장에서는 가성비와 편리성을 근거로 든다. 대학이 제공하는 주요 산물이 수업이라면, 학점 당 비용에 있어 MOOC와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대학, 온라인대학, 방송통신대학의 계보를 따르면 알 수 있다. 또한 e-러닝이나 가상대학이 지닌 편리성은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평생교육에 적합한다. 이에 많은 대학들은 개방 강의,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판매하고 있다.³¹⁾

반면 MOOC가 대학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무형의 경험과 학문의 변화를 근거로 삼는다.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와의 대면 상호작용, 우정, 토론, 협동 등 전통적인 대학이 지녔던 특별하고 가치 있는 활동이 교육에 있어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 교육의 본질은 소프트웨어의 정교함과 상관없이 기계에 의해 모방될 수 없는 교수와 학습자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있다”³²⁾는 것이다.

28) 홍정민(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 에듀테크』(서울: 책밥), pp.216-218.

29) MOOC의 주요 플랫폼으로는 유대시티, 코세라, 에텍스가 있으며, 오픈 유니버시티(영국), 이버시티(iversity, 독일) 등의 교육기관이 대표적이다.

30) Donaldson et al.(2015), p.26.

31) 1989년 개설된 온라인 피닉스대학교는 강사 17,000명의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며, 싱가포르국립대학, 스탠퍼드대학 등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32) Carr(2012)(Donaldson et al.(2015), 재인용), p.44.

또한 학문이 복잡화하면서 과학이 메가 사이언스, 퓨전 사이언스 등 대규모 시설 및 기반 구조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기에 학제간 융합연구 및 토론이 가능한 연구중심 대학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MOOC를 둘러싼 논란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철학적 문제라 할 수 있으며, 대학 교육의 본질과 효용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등교육 비용의 상승 및 임금 정체의 격차라는 상황 속에서 기술발전으로 가능해진 대안적 교육 형태인 MOOC는 대학교육이 콘텐츠 전달 이상의 경험과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전통적 믿음의 강화와 이에 대한 의심을 동시에 촉발시켰다. MOOC에선 전통적인 면대면 상호작용은 아니지만 학습자의 참여교육, 맞춤형 교육,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중심이 가능할뿐더러 무료 교육, 고품질 교육, 포변 교육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습자는 전통적인 대학교육의 효용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MOOC가 상징하는 기술담론에서 대학교육은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엘리트 연구중심 대학은 살아남아 대규모 과학연구와 학제간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인맥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지만, 대다수의 대학은 대중화된 고등교육, 원격교육,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MOOC와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오세정, 2009). 명문대학이 아닌 대학에 등록하기보다는 MOOC를 통해 학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에 소수를 위한 명문대학과 대다수를 위한 가상대학의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세계적 현상으로 전파될 것이다.³³⁾

나. 대학의 자본 담론

대학의 자본 담론이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대학이 민영화 및 시장화 되었음을 뜻한다.³⁴⁾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정책 분야에서 ‘시장 논리’가 강조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논리로 자리 잡았다(나민주, 2008). 특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은 시장의 직접적인 요구에 영향 받기에 시장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학의 기업화, 대학 교육의 직업화, 인문학의 주변화가 발생했다.

대학의 자본 담론은 20세기 초에 부각되었다. 20세기 초 미국의 기업가 카네기는 대학이 히브리어나 셰익스피어보다는 속기와 타자 기능을 습득할 것을 강조했다. 카네기는 대학의 자유교양 및 인문 교육을 불신하는 반(反)지성주의를 드러냈고, 미국 대학들의 위원회를 채운 대다수의 기업인들은 이에 동조했다.³⁵⁾ 한편 미국의 또 다른 자본가인 테일러는 테일러주의(Taylorism)를 대학교육에 적용하여 효율

33) 오세정(2009), 미래에 우리는 어디에서 공부할 것인가,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김광웅(편)(서울: 생각의 나무), pp.299-304.

34) 신자유주의는 중앙집권적 경제, 국가 기반 사회주의, 파시즘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F. 하이에크에 의해 탄생되었고, 미국의 M. 프리드만이 이 이념을 민영화와 탈규제로 확장시켰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인간자본론 및 공공선택이론으로 보완되었다. 교육의 신자유주의는 민영화, 즉 정부의 통제나 책임을 줄이고 사적 영역으로 확장하며, 시장의 논리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심성보(2017),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의 한계와 향후 과제, 『대학: 담론과 쟁점』 2, pp.62-74.

35) 카네기는 자신이 만든 필라델피아 피어스 경영 및 속기대학(Pierce College of Business and Shorthand)의 1891년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세상이 이렇게 엄혹한데, 졸업생들이 야만스런 히브리인과 그리스인을 귀감으로 받들며 제 몫을 해내겠다는 말입니까? ... 저는 흐뭇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은 죽은 언어를 배우는 헛수고 대신 속기와 타자 기능 습득에 온 시간을 쏟았고(중략), 이제 각자의 생업을 확보하여 삶을 영위해갈 기능을 갖춰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J. Wall(1989), *Andrew Carnegie*(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pp.834-35(프랭크 도너휴(2008), p.38, 재인용).

성을 추구했다. 대학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 생산성, 표준화 등의 기업식 관리가 대학에 접목된 것이다. 총장은 최고경영자로, 교육은 전략으로, 학생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으로, 교과 과정은 투입-산출의 모델로 바뀌었다.³⁶⁾

1960년대 확산된 인간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은 자본의 관점에서 인간을 파악함으로써 교육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논리적, 이론적 준거를 제공했다. 시장, 경제, 자본의 논리로 교육을 파악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³⁷⁾ 이에 대학에서는 효율, 생산성, 수익성 등과 같은 기업식 문화가 전파되면서 합리화되었다. 교육이 계량화 가능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재편되는 한편, 기업체에서 요구되는 역량(competencies)을 추출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평가했다. 또한 교육의 전체 과정을 투입-과정-산출-피드백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공학적(engineering) 모델로 파악했다. 이러한 환류모델에서 대학교육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취업률로 평가되고, 측정할 수 없는 내용들은 암묵적으로 배제되었다.³⁸⁾

대학의 성격이 경제적 논리로 재구조화되고, 교육의 목적이 취업 준비 및 외부 연구용역의 수행으로 탈바꿈하면서 대학의 자본 담론은 고착화되었다. 대학의 시장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정체되고 비대해진 대학 조직을 쇄신하고 현실적 효용에 대한 강조한다고 보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선 대학의 특수성이 부당하였으며 인문학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찬반논란과는 상관없이 대학의 시장화는 근본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서보명(2015)은 대학에서 교육자나 지성보다는 기술과 직업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이라 정의했으며, 도너휴(2014)는 자본주의가 대학에 “암세포식 전이”를 일으켰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시장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시장화가 전제하는 정부 역할의 축소가 아니라 정부정책수단으로서 시장논리가 도입했다는 점이다. 사회조직의 작동원리에 있어 시장과 정부는 대조적인 힘으로 여겨져 왔고, 따라서 서양 국가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복지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장논리가 강조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발전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고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시장논리가 정책적으로 채택되었다.³⁹⁾ 특히 1980년대까지의 교육정책이 주로 초, 중등교육의 개혁에 집중해왔다면, 1990년대부터는 대학교육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 국제경쟁의 맥락에서 대학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정부는 특히 대학재정지원정책을 통해 대학교육의 시장화를 정책적으로 추구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결국 시장논리에 따라 팽창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다시금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980년대에 정부는 사회수요접근법에 따라 규모의 경제와 대학진학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의 양적 팽창을 장려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저성장과 높은 청년 실업률, 그리고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한 과잉교육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대학의 축소 및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69%이며, 이는 OECD 평균보다 27%나 높은 수치이다.⁴⁰⁾ 더

36) 대학교육에서 효율성과 효용성을 추구하는 기업적 사고는 미국 특유의 영리목적대학(Corporate University)이라는 모델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교육은 표준화되고 교수는 지식전달자로 축소된다.

37) 나민주(2005), 『시장·정부·대학: 대학재정지원정책의 이해』(파주: 한국학술정보), pp.1-15.

38) 조상식(2016), 신자유주의시대 대학과 ‘포스트’ 신자유주의 대학정책, 『대학: 담론과 쟁점』 2, pp.93-104.

39) 하연섭(2006), 정책아이디어와 제도변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4), pp.1-27.

40) 김태성(2017),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해설: 대학 및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8(3), pp.333-353.

육이 1997년 IMF를 계기로 대학이 팽창한 반면 학령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대학 정원이 대학진학인구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인한 고학력 실업, 학력/직업의 불일치, 전공/직업의 불일치 현상은 ‘대학교육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신화를 파괴하며 정부의 대학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평등추구정책에서 정부주도 및 대학자율에 의한 수월성 추구로 초점이 변화하였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대학재정지원정책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지원과 자율성 보장)’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최소한의 질적 수준 확보에서 세계화, 일류화 추구)’, 그리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으로 요약되며, 이는 각각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상위 목표를 추구한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평가 및 재정지원의 연계성 강화를 활용했으며, 이는 평가적 국가(evaluative state), 경쟁윤리(competitive ethic), 그리고 발전전략적 평가 및 사후평가의 중시라는 특성을 띤다.⁴¹⁾ 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정부의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써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고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논리이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5.31교육개혁안 이후 각 정부는 수월성과 형평성의 원리를 조금씩 다르게 추구하면서도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 목표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실행해왔다. 정부는 약 1.5조원 규모(2016년 기준)의 재정을 투입하여 1999년의 BK21, 2010년 HK, 2010년 ACE, 2012년 LINC, 2014년 CK, 2016년 CORE, 2016년 PRIME 사업 등을 실행했다.⁴²⁾ 이들 사업의 목표는 대학의 학부교육, 연구, 산학협력 역량 강화 및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등 다양하지만 모두 산업 논리에 따라 이공계 위주로 대학을 구조개편 할 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와 차등 재정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동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 3〉 정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2016년 기준)

구분	BK21 플러스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ACE)	대학/전문대 특성화사업 (CK/SCK)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사업 (PRIME)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 (CORE)
대상 (지원단위)	대학원 (사업단)	학부 (대학)	학부/전문대 (사업단/대학)	학부 (대학+사업단)	학부 (대학)	학부+대학원 (대학)
'16년 예산	2,725억원	594억원	2,467억원 2,972억원	2,240억원	2,012억원	600억원
사업 기간	'13~'20(7년)	'10~계속(4년)	'14~'18(5년)	'12~'16(5년)	'16~'18(3년)	'16~'18(3년)

출처: 백성기 외, 2016

문제는 정부가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의 근거를 개량적 평가 방식 및 대학의 서열화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안은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정원 감축과 대학 교육

41) 나민주(2005), pp.138-145.

42) BK21(대학원의 교육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HK(인문한국사업),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혁신, 선택과 집종의 교육과정 개발), LINC(교육부주도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기반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CK(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대학의 강점분야와 특성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

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학 등급제를 통해 재정 지원 및 인원 감축 비율에 차등을 두어 부실 대학을 퇴출하는 것이다. 2023년까지 대학 정원 16만 명을 감축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4년제 대학 191곳 가운데 161 곳에서 254건의 학과가 통폐합되었다.⁴³⁾ 그러나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 때문에 성과 부풀리기가 만연하고 기초 학문이나 인문학, 예체능은 처음부터 불리하다. 또한 대학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된다. 김창인(2015)은 대학구조조정정책이 “내용이 시장주의적이고 형식이 반민주적이고 폭력적”⁴⁴⁾이라고 지적한다.

대학의 서열화 및 이를 토대로 한 구조조정은 대학의 자본화 및 시장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현재 국제 대학평가는 「더 타임스」(영국), 「유에스 뉴스」(미국) 등의 언론이나 중국 상하이 자오통(交通)대학 등의 기관에서 발표하며, 이는 각 대학의 변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대학협회(EUA)의 「국제대학순위평가와 그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대학순위평가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⁴⁵⁾ 평가 대상이 강대국 또는 부자나라들의 일부 대학에 치우치고 평가 방법이나 항목 등도 이들에 유리하게 짜여 있기에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한 영향력은 너무 파괴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서열화의 성공요인이 지표의 산출방법이 아니라 서열 자체라는 주장⁴⁶⁾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 지표의 모호성과 불완전성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교육을 숫자로 환원하여 서열을 지을 수 있다는 경제논리의 주류화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학의 시장화는 여러 모로 논쟁의 대상이다. 시장 논리가 교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의 근본적인 한계 뿐 아니라, 계량적 평가 방식의 오류, 그리고 시장이 지닌 폭력성과 교육불평등의 심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는 교육 분야에서 거대한 유행이자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그 해석과 집행은 국가별로 선택적이고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 기술자본 담론과 대학

기술 담론이나 자본 담론이 결국 대학의 서열화와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을 볼 때, 기술과 자본이 긴밀히 결합된 기술자본 담론은 대학의 체질과 양태를 더욱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김혜나(2017)에 따르면 “기술자본주의(technocapitalism)는 시장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발명과 혁신을 위한 지식의 상품화를 추구하며 그 바탕에는 과학과 기술로 세계를 전면 개조할 수 있다는 하이 모더니즘(high modernism)의 신념이 깔려 있다.”⁴⁷⁾ ‘기술-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카를로타 페레즈 역시 기술적 변화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에 상응하는 각종 경제 제도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주장했다.⁴⁸⁾ 이처럼 기술자본 담론은 기술과 자본의 담론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음을 뜻하며, 나아가 사회적 제도와도 구분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대학 역시 산업-공학적 시스템을 통해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기 위한 도구로써 기능할 뿐이다.

기술자본 담론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에서 자명하다. 우리나라는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과

43) 교육부(2014), 2008~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김창인(2015), 재인용) p.223.

44) 김창인(2015), p.209.

45) Andrejs Rauhvargers(2011), Global university rankings and their impact, *EUA REPORT ON RANKINGS 2011*, Europe University Association, p.20.

46) 도너휴(2008), p.240.

47) 김혜나(2017), 대학의 융합 시나리오와 그 딜레마. 『인문논총』 74(4), p.419.

48) 홍기빈 외(2017),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우리는 왜 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가』(서울: 휴머니스트), pp.98-99.

학기술을 경제 성장의 도구로 보았고, 국가가 주도하여 과학기술의 목표를 제시하고 집중육성하고 평가해왔다. 개발도상국으로서 단 시간에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과학을 활용하는 방식은 ‘기술입국론’ 혹은 ‘추격주의(catch-up)’ 사고방식의 논리를 드러낸다.⁴⁹⁾ 그 결과 대학은 시장 체제의 생산과 이를 위한 행정적 효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아닌 ‘초국가적 관료기업’으로 탈바꿈한다.⁵⁰⁾

대학의 기술자본 담론은 대학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변화시켰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이 창의성, 인성을 부각시켰다고 여겨지지만, 이는 4차 산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등장했다. 지식정보사회 담론에선 모방형 인적자본에서 창조형 인적자본으로의 변화가 강조되었고,⁵¹⁾ 21세기 미래사회라는 개념이 대두되자 문제 해결형 인재에서 문제 창조형 인재로, 전문지식형 인재에서 융합형 인재로, 개인성과형 인재에서 관계성과형 인재로의 전환이 주장되었다.⁵²⁾ 이는 결국 그동안의 주입식 교육과 단편적 지식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의 진보에 따라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부각시키고 이를 실질적인 적용과 연결시킨 점은 기술자본 담론에서 강조된 변화이다.⁵³⁾

또한 기술자본 담론은 소품종 다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하는 산업에 맞추어 교육 역시 유연성 있는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데 맞춘다. 이를 위해 SW교육이나 코딩교육을 강조하고 문제해결을 체험하는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수행중심교육(performance based learning)을 통해 직무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학습활동으로 과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수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을 계획 및 시행하며, 목표 성취를 근거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 진로, 취업, 현장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며, 지식의 투입과 산출을 동일시하는 공학적 모델에 바탕을 둔다. 수행 중심, 역량 중심의 교육은 교육의 과정을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 논리를 강조한다.

문제는 교육의 맥락에서 현장을 예측하기란 어려우며, 교육의 의도와 결과 사이의 불일치는 교육의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교육의 성과에 대해 단기간에 평가할 수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규제할 경우 단편적이고 표층적인 학습으로 흐르기 쉽다. 그리하여 효율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기술자본 담론은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기초학문의 축소를 초래한다.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적 명성을 보장해 줄 명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서열화가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브랜드 대학(brand-name universities)과 대량공급형 대학(mass-provider universities)의 구분은 뚜렷해져서, 브랜드 대학은 나머지 대학과의 구별짓기를 위해 배타성을 강조할 것이라 예상된다.⁵⁴⁾ 국내의 경우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양적 성장에 용이한 종합대학 체제를 구축했고, 각 대학의 차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급심한 서열화 현상을 낳게 되었다.⁵⁵⁾ 이에 기술자본 담론 뿐 아니라 지역 격차와 인구감소가 결합되면

49) 이러한 문제의식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의 집필진의 논의에서 고루 드러난다.

50) 빌 레딩스(1996), 『폐허의 대학』 윤지관 · 김영희(역)(서울: 책과 함께, 2015), p.32.

51) 김세직, 정운찬(2007),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자본과 이를 위한 교육개혁, 『경제논집』 46(4), pp.187-214.

52) 오현석, 유상옥(2015), 『교육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미래인재의 조건』 김동일 편(지역: 학지사), pp.139-171.

53) 김성열(2017),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혁신: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발표회논문집』, pp.5-27.

54) James Twitchell(2004), *Branded Nation: The Marketing of Megachurch, College Inc., and Museumworld* (Simon & Schuster) (도너휴(2008), 재인용), pp.236-238.

55) 박진완(2017), pp.45-46.

대학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리라 예측된다.

그런데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각된 특성화 전략은 일면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기초교육, 기초연구의 축소라는 문제를 초래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기초교육과 기초연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초교육과 기초연구가 결국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로 합리화되었다. 이미 시작부터 기술자본의 담론을 드러낸다. 게다가 대학교육 개혁의 방향이 사업 중심, 현장 중심, 융합 교육인데다 단기적이고 유동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하게 되다보니 대학교육 및 연구의 방향이 기초학문보다는 응용학문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대학이 수행해야 할 기초연구 및 기초학문을 강조하면서도, 응용기술로 연결되고 경제적 효과를 보여야만 그 가치를 인정하는 기술자본 담론에서 명확한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는 기초학문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대학의 기술자본 담론은 무용과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있어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국내와 해외의 차이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모든 무용과가 같은 선상에 놓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무용과 안에서도 명문-일반, 서울-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각 학교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과 문제를 지님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반면에 무용과 자체가 이미 극소수 명문대의 반열에서 소외된 상황이며,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다른 예체능 학과에 비해서도 사회적 존재감이나 기반에 있어 불리하다. 따라서 무용과 간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상징적인 위치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실용학문을 중시하는 기술자본 담론에 따라 대학 무용과가 제공하는 고등무용교육 역시 무용의 본질적 가치를 탐색하는 여유를 확보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강조하게 된다는 점이다. 무용의 본질에 대한 탐색은 ‘순수’ 무용, 혹은 예술무용 위주의 담론을 형성했고, 이는 엘리트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육을 혁신한다고 하여 전통적인 지식과 방법론을 모두 폐기해야 할 것으로 여기거나 새로운 학습방법을 만병통치약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⁵⁶⁾ 혁신을 위한 혁신 역시 반지성주의 및 근시안적 유행에 머무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III. 대학 무용과의 위기 담론

우리나라의 대학 무용과는 1980년대 대학의 팽창과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힘입어 성장했다. 설립연도 별로는 1990년대에 크게 양적으로 팽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집중화가 두드러진다.⁵⁷⁾ 미국과 마찬가지로 예술이자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둔 국내 대학 무용과는 무용예술, 무용학, 무용교육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구성했고, 이렇게 배출된 졸업생들은 1990년대 무용계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56) 이윤정(2017), 변곡점에 선 한국의 대학교육과 4차 산업혁명 - 지식담론에서 교육담론으로의 전환 필요성, 『인문과학연구논총』 38(2), pp.141-181; 김성열(2017), p.19.

57) 설립연도에 따라서 1960년에 4개교, 1970년에 6개교, 1980년에 12개교, 1990년에 17개교, 2000년에 4개교가 설립되었으며, 지역별로 서울에 15개교, 전라도 6개교, 경상도 10개교, 경기도 5개교, 충청도 6개교, 강원도 1개교가 설립되었다. 박선희, 조남용(2009), p.3.

무용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는 무용의 사회적 위상을 높였지만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어져왔다. 실기 위주의 획일적 입시제도와 교과과정(김채현, 1994; 고경희·백현순, 201; 배귀영, 2003, 신민혜 2017), 실기의 3분법 체제, 순수무용/실용무용의 배타성과 기술 습득 위주의 교육 방법(김경숙, 박수경, 1997; 박선희·조남용, 2009; 배귀영, 2003; 서예원 2003), 그리고 구호와 실천의 괴리(신민혜, 2017) 등이 지적되고, 대학무용 교육과정의 개선방향(정명지, 2011; 황인주, 2001; 최재희, 2015)이 꾸준히 제안되었다.

그러나 고등무용교육의 특성과 지향점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무용과 안팎의 상황이 변하면서 급진전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무용과의 경쟁률, 진학률, 졸업률이 저하되었으며, 이에 무용과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의 입시경쟁은 무용과의 학생유치경쟁으로 변환되었다. 현대 대학구조조정이 대비하려는 학령인구감소를 무용과는 먼저 겪은 것이다. 문광부의 통계(대학알리미 정보고시)에 따르면 2005년만 하더라도 43개에 달하던 무용과가 2016년에는 35개로 축소되었다.⁵⁸⁾ 이러한 변화는 지방부터 가시화되어 지방 대학의 무용과들은 통폐합되거나 폐과 위기에 놓였고⁵⁹⁾ 존립하는 무용과들도 지속적으로 인원 감축이 일어났다. 이에 생존경쟁을 벌이는 지방 대학들은 순수무용에서 실용무용, 생활무용으로 범위를 확장했는데, 이는 진학률을 높여 학과가 존속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2000년대 시작된 정부주도의 대학지정재원사업들과 구조조정은 무용과를 주변화시킴으로써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앞 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정부는 다양한 국가재정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막대한 지원금을 주거나 규제를 통해 대학을 관리해왔으며, 등록금의 재정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존립을 위해 정부의 개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인원감축 및 학과 개편을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주도의 사업들이 목표나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이공계 위주로 대학을 구조개편할 뿐 아니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인문학 및 예체능 학과의 속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왜곡시킴으로서 이들 학과가 직간접적으로 통폐합되거나 정원 축소되었다. 대학의 지향점을 바꾸어 놓은 기술 자본 담론은 무용과에게 거스를 수 없는 변인이 되어 존립을 위협했다.

특히 취업률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표는 인문학 및 예체능 계열에 큰 타격을 주는 근거로 작용하면서 대학무용교육의 담론을 취업 중심으로 전환시켰다.⁶⁰⁾ 대학무용교육에서 진로 문제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온 문제이지만(박현옥, 1990; 김화숙, 1993; 김채현, 1994; 김명주, 1996; 조재욱, 1998) 2000년대 이후, 특히 대학구조조정을 계기로 취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재편된 것이다(박기선, 2003; 박선희, 조남용, 2009; 오레지나, 2013; 배수을, 2016; 신민혜, 2015, 2016, 2017; 최윤선, 2012). 1993년도 김화숙의 연구가 무용과 졸업생 진로문제의 방향 모색을 위한 무용과의 체제분석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무용과의 특성화 및 산학간 협력 방안(배수을, 2016), 특성화 및 다각화(오레지나, 2013), 역량 중심의 교과과정(신민혜, 2015), 진로다양화 및 세분화(신민혜, 2016), 선발-교육-진로의 전방위적 변화(신민혜, 2016), 시장 지향 무용전공 교과과정 모형개발을 제안(최윤선,

58) 박선희, 조남용(2009); 신민혜(2016), 진로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한 무용학과 진로교육 교과과정 및 운영방안, 『무용예술학연구』 61(4), pp.13-27.

59) 2009년 대전대 무용학과는 방송공연예술학과로 전환, 2010년 청주대 무용학과 폐지, 순천향대 연극무용과로 통합, 2012년 동아대 무용학과가 폐지, 원광대 무용학과는 스포츠산업·복지학과로 통폐합, 2013년 대전대 무용과는 연극영화과로 통폐합되고 2014학년도 무용학과 신입생 선발을 중지되었다. 오레지나(2013), 대학무용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특성화 방향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2), pp.1-12.

60) 2013년 7월 예술분야 취업평가 제외되기도 했으나 궁극적으로 담론 자체가 변화되었다고 본다.

2012) 등 매우 구체적이고 산업적인 시장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무용과의 예술-인문학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산업자본의 체제와 논리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경향도 감지된다. 정강우(2015)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한 직무표준 개발기준을 제시하며 대학-유관기관-학생간의 상호협력 체제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고, 김보미(2016, 2017) 역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하여 무용계열학과의 교육과정과 개설과목을 분석함으로써 무용교육지도자의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것을 주장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국가-기업-대학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산업계를 기반으로 하여 대학교육을 학문과 지식보다는 일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과과정을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중심의 모듈로 개편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기초학문 위주 및 공연을 위한 실기교육에 치우친 무용과의 교과과정은 직무별, 단계별로 체계화되어야 할 직무능력배양에 결핍돌로 지적된다. 대학무용교육에 있어 산업 논리의 도입이 늦음을 질책하는 이 논문들은 무용교육인의 직무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학습과 일의 격차를 줄이고, 일과 교육 훈련 및 자격을 연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나경아·한석진(2015)은 전통적인 “순수예술” 개념으로 인해 무용가가 취업에 소극적 태도를 취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노동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사고와 가치에 대한 고려는 예술적, 미적 가치의 타락과 연결 되어 생각[되지만] ... 무용전공자가 현장에서의 실무적, 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진출 가능성을 개척해나가는 능력을 배운다는 의미로서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은 예술가의 일자리 모색을 위한 보다 근본적 방안이 될 것이다.⁶¹⁾

이처럼 취업 중심의 고등무용교육 담론은 대학 무용과의 존립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었으며, 국가가 주도하여 도입한 산업 논리는 무용과 교과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무용과의 미래 전망에 있어 기술 담론은 산업 담론에 비하여 덜 두드러진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영역은 주로 예술창작에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으며, 교육에서의 활용은 전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미희(2014)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출간된 무용과 테크놀로지에 관한 연구물은 학위논문 81편, 학술지 79편으로 총 160편에 달하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연구가 급진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인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사업(2008년) 등의 정부사업, 대학연구비, 국제학술대회 등의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에 융복합 연구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고 지적한다.⁶²⁾

그러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는 별도로 테크놀로지를 무용교육에 도입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추세이다. 남수정(2002)과 황인주(2006)의 연구에서 보듯 테크놀로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자재 및 전문교육인력의 확보의 부족, 나아가 커리큘럼 상의 변화 부족으로 인해 무용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영역도 주로 무대 공

61) 나경아, 한석진(2015), 대학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과정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56(5), p.53.

62) 이미희(2014), 무용에서의 테크놀로지 연구동향 분석 및 전망, 『우리춤과 과학기술』 25, pp.127-157.

연에만 치중될 뿐 교육에서 도입되지는 않았다. 10년이 지난 최근 연구에서도 테크놀로지를 외면하는 무용교육이라는 양상은 비슷하게 감지된다. 이미희(2014)는 2012년 이후 공연에서의 활용 사례는 증가하는 데 반해 교육에서의 활용에 관한 논문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은경(2017) 역시 기술은 빠르게 발전되지만 대학교 무용교육과정에서의 기술교육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디지털 댄스 리터러시(digital dance literacy)의 함양과 MOOC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시대에 대학 무용(학)과는 무용과 과학기술을 융합·발전시켜야하는 과제와 다양한 소양과 지식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양성에 적합한 새로운 무용교수·학습 패러다임 개발이 필요하다”⁶³⁾고 주장한다. 결국 무용과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서 기술 담론은 꾸준히 제기되고 인식되지만 여전히 필요성 제기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함을 나타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대학의 기술자본 담론에서 무용과는 다시금 기술적 혁신의 포용을 주장하고 이를 창의성 및 취업과 연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사례는 드물고 구호와 제안만 넘친다. 비디오댄스 혹은 디지털 퍼포먼스 장르가 형성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이것이 커리큘럼에 포함된 무용과는 드물고 그마저도 기본적인 컴퓨터 시설이나 조명, 카메라 장비, 전문 영상편집 프로그램 없이 진행된다. 또한 컴퓨터 및 영상프로젝터 시설을 갖춘 실기실을 가진 무용과도 드물다. 기초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없이 갑자기 혁신이 일어날리 만무하고, 많은 무용공연들은 전문적인 업체나 전문가에게 의존하여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IV. 무용과의 위기에 대한 재고찰

II장과 III장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학교육에 파고든 기술자본 담론은 4차 산업혁명과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되었고, 이를 근거 삼아 우리나라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 대학의 구조와 특성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대학의 무용과는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현실적으로는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를 위해 취업률 높이기, 융복합 연계전공 및 산업-공학모델의 적용, 4차 산업혁명의 가치 강조, 진로교육 및 학과 특성화 등 다양한 자구책들을 고안하고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무용과가 또 한 번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절대가치가 아니라 대학의 특성을 변화해 온 기술자본 담론의 일부로 본다면, 나아가 이를 나름의 문제점과 모순을 가진 사회적 구성체로 본다면 무용과의 위기 역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무용과의 위기 담론에서 발견되는 내적 모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무용교육의 이상적 목표와 현실적 전략의 괴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고용불안정성, 그리고 사회문제의 복잡화로 인해 산업구조, 노동시장, 직무역량 등에서 큰 변화가 예측됨을 의미한다. 이에 기술 개발 자체보다는 이미 개

63) 신은경(2017), p.20.

발된 기술을 새롭게 활용한 아이디어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창의력과 융합 능력이 각광받는다. 또한 이 세돌-알파고 대결로 상징되는 AI의 충격으로 인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감성에 기초한 예술 직업군이 부각되리라 예측되었다. 2016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을 분석하여 발표했는데, 무용가 및 안무가가 대체되지 않을 직업 순위 6위에 오르면서 무용교육의 담론에서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⁶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은 진로 및 전문인력에 초점을 맞춘 역량중심 교육(competency-based learning)으로 전환했다. 3R로 상징되던 전통적 리터러시 개념은 문화적 리터러시로 확장되고, 전미교육협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단체가 주도하여 역량을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협동(collabor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 등으로 규명하였다.⁶⁵⁾ 이에 영향 받은 교육부는 2016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자기 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통체 등의 하위 역량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을 서열화하여 우수한 학교/학과에 집중지원하고 열등한 학교/학과를 구조조정하는 경쟁모델을 도입했다. 이 때 평가지표는 정성 평가와 정량평가를 모두 활용하지만 정량평가에 초점이 있으며, 취업률, 입학률,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이 지표의 구성 방식이나 평가 방법이 불완전하고 편향적이며 사업의 다양성과 상관없이 유사한 평가가 적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는 평가 지표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취업률이나 교육-시장의 미스매치 등의 평가항목은 인문학 및 예술과의 특성과 맞지 않기에 이들 학과를 구조조정 1순위로 내몰고 있다.⁶⁶⁾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의제가 결국 취업으로 귀결되는 상황은 무용과에 분열적인 상황을 야기한다. 무용교육은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복합적인 역량을 부각시켰고,⁶⁷⁾ “무용을 통해 함양되는 표현적, 이해적, 상상적, 소통적, 내성적 자질의 총체로서 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⁶⁸⁾인 댄스리터러시를 교육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의 무용과는 당장의 대학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업률, 전공-직업 정합성, 만족도 등의 지표를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제시하거나 고도로 세분화되고 서류를 타는 융복합전공을 제시한다. 취업과 창업은 학회나 토론회의 주제로 각광받으며 장려되고, 매우 지표화된 경제-공학 모델을 적용하는데 바쁘다. 각 대학의 무용과는 졸업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산학연계 취업 루트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에 대해 보다 주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용 전공 졸업생의 취업률은

64) 박가열 외(2016),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65)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al Association)는 2002년 ‘21세기 역량 파트너십(The partnership for 21C skills)’에서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협동(collabor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을 내세웠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요 역량 선정 및 정의(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DeSeCo)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인력개발에서 지향해야 할 역량 규명했다.

66) 변기용, 이석열, 라은중(2017),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체제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5(5), pp.275-302.

67) 최재희(2015), 창의·인성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무용교육의 방향, 『한국체육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47-51.

68) 임수진(2015),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을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이 엄격하게 적용된 2014년도엔 29.7%로 집계되었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취업자의 개념과 근접하도록 조정”⁶⁹⁾된 2015년도의 통계에선 63.0%로 집계되었다.⁷⁰⁾ ‘개인창작활동’ 및 ‘프리랜서’ 직종을 포함시키자 전체의 평균인 64.3%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수치가 된 것이다.⁷¹⁾ 이러한 수치의 편차는 무용을 비롯한 예체능학과와 취업방식이 개인창작활동이나 프리랜서 등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 방식의 취업, 즉 자생적이고도 닫힌 경제순환구조이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2차 교육서비스인 ‘레슨’의 비율 역시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표인 전공 대분류별 전공-직업 적합성 수준에서도 예체능계열은 79.9%의 불일치로 가장 열악하지만 이는 대학교수와 같은 정규직 직종만 고려할 뿐 레슨 등의 교육관련 직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주관적 보고(self-report)에 따라 측정해보면 52.2%에 달한다는 점에서 계량화된 지표와 현실의 괴리를 뚜렷이 드러낸다(박진완, 2018).

더욱이 구조조정평가의 지표 중 교수확보율이나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예술계열이 대학 일반 평균보다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계열 학생보다 예술계열 학생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나 애착, 직무전문성 등이 높다는 점에서 과연 예술계전공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게 논리적인지 반문할 수 있다(박현정, 2015; 박진완, 2018) 무용계의 경우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무용 전문인력 형성구조 분석과 직무직급의 표본 분포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무용수로 취업한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학교 교·강사가 뒤를 이었다(김영옥, 2007). 무용전공생의 진로 희망분야에서 무용수나 안무가가 45.3%를 차지하고(박현정, 2016), 실제 취업분야도 무용수나 안무가가 54%라는 연구와 무용관련 직종(무용수, 무용강사, 유치원 교사, 문화센터 강사 등)이 67.8%를 차지한다는 연구를 보면 무용과의 전공-직업 적합성은 결코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⁷²⁾ 경제적 보상은 적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결국 개량적 지표는 불완전하고 편향적일 뿐 아니라 등록금의 재정의존률이 높은 사립대학이 정부주도의 규제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표를 자의적으로 활용하여 예술계열의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⁷³⁾

그렇다면 레슨 등의 비정규적이고 2차적 교육서비스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무용계의 취업방식을 산업 논리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신분보장과 재정적 안정이 확보된, 소위 4대 보험 등록이 가능한 무용단체가 34개에 불과한 무용계에 일반 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⁷⁴⁾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무용전공생의 취업이 무용단, 극장, 카지노, 테마파크에의 취업과 교습을 포함하는 등을 볼 때 무용전공생의 안정적이지 않은 취업 구조가 한국만의 문제라 할 수 없다.⁷⁵⁾ 또한 호주의 경우 무용 인력들이 공연 분야에만 종사하는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으며, 대부

69) 류방란(2017),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서울: 한국교육개발원), p.3.

70)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 연계 취업통계연보(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서울: 한국교육개발원).

71) 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서 무용 전공자의 졸업자 897명 중 474명이 취업했고, 이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196명, 프리랜서가 206명, 개인창작활동이 50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2016).

72) 나경아, 박현정(2015); 신민혜(2017).

73) 박진완(2018), pp.50-54.

74) 국내 무용단은 약 268개에 이르나 4대 보험 등록이 가능한 무용단체는 2015년 기준 국공립 한국무용단 19개, 국공립 발레단 2개, 사립 발레단 2개, 시립 현대무용단 1개가 존재한다(최경희(2017); 나경아, 한석진(2015) 종합).

75) C. Rotman(2016), Career Counseling Interventions to Link College Dance Study to Professional Careers, Master's thesis, Saint Mary's College of California, p.4(최경희(2017), p.37 재인용).

분의 경우 기획가, 행정가, 교사 등 2개 혹은 그 이상의 복수직업을 가진다고 한다.⁷⁶⁾ 이렇게 보면 무용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취업 좌표를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나아가 시장맞춤형 인재를 기른다는 논리 역시 4차 산업혁명이 내세우는 직업의 유연성과 불확실성에 위배된다. 시장이 요구하는 기준을 위해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방식으로 역량을 기르고 준비시키지만, 실제 시장은 유동적이다. 또한 특성화 및 다각화, 현장과의 연계, 실제 적용가능성 등의 원칙은 이른바 3차 산업혁명에서 구현된 인재상에 부합하기에 4차 산업혁명의 방향과 맞지 않다. 무용계에서도 실기 위주, 이론과목 위주에서 벗어나 실무교육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무용계의 시장을 예측하고 준비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취업을 기계적으로 높이는 것도 위험하지만, 기존의 대학무용교육을 두루뭉술하거나 시대착오적이라 치부하는 것도 위험하다.

결국 무용과가 내세운 창의성과 융합능력과 같은 교육적 가치가 산업지향적인 현재의 전략과 괴리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위기 담론으로 인해 무용과는 시류 변화에 긴밀하게 반응하며 몸집을 불리고 자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⁷⁷⁾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의제에 따라 변화방향을 살피고 맞추어 나가는데 민감하지만, 변화는 대체로 가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일 뿐 실제 교육의 현장에선 명확하게 감지되지 않는다. 여전히 따라하기 방식의 실기시험에 치중된 신입생 선발방식은 창의적 인재라는 교육이념과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입시무용을 거치며 매우 획일화된 학생들에게 수동적인 실기 교육과 주입식 이론 교육의 경직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은 적다.⁷⁸⁾ 또한 예술-과학적 역량을 강조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주창하지만 막상 교육내용/방법에의 적용은 더디다. 무용과의 미래를 다룬 연구들은 큰 체제변화나 커리큘럼 변화 등은 많이 논의하지만 정작 수업 안에서 실천되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탐구는 적다. 김성열(2017)이 지적하듯 결국 교육의 혁신은 가르치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탐구를 요구하지만 교수자가 교육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새로운 학사제도나 전공과정의 개설보다도 내부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실험과 투자가 장려되어야 한다.

2. 학문분과로서의 정체성과 융합연계교육

대학제도와 결합된 기술자본 담론은 (순수)무용과의 존재 자체를 비실용적, 시대착오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나경아/한석진(2015)이 드러내듯이 ‘칸트 식의 순수예술’ 개념은 예술학과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로 제시되고, 타 전공과의 연계나 융합은 이를 타계할 대책으로 제시된다. 특히 예술계열과 공학계열의 융합모델은 대학구조조정에서 매우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으로 추구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강대학교의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나 인하대학교의 휴먼아트테크놀로지 전공이 있다.

무용과의 입장에서든 현재 각광받는 공학계열과의 결합은 대학 내 존속을 일단 보장해줄 뿐 아니라 타 학문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무용과에선 성취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연구사업이나 국책사업 등 재정적·이념적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무용학에서 예술-과

76) D. Bennett(2009), *Careers in dance: Beyond performance to the real world of work*, *Journal of Dance Education* 9(1), pp.27-34(박현정(2015), p.94 재인용).

77) 최경희(2017)는 대학무용(학)과 및 무용 전공의 현황(소속 및 명칭, 정원, 교직이수, 대학원 개설의 변화 추이를 2016년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과 비교함).

78) 신민혜(2017), 대학 무용학과의 존립을 위한 선발-교육-진로 방향성 모색, 『무용예술학연구』 63(1), pp.67-85.

학의 융합모델은 원론적이고도 이상적으로 제시된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창조적 사고력과 창의 융합력을 위해 미래 통찰적 예술-과학 인재를 양성하는데 무용이 이바지해야 한다거나, 무용과 과학기술을 융합-발전시키고 다양한 소양과 지식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이다(신은경, 2016; 2017). 이러한 논리에선 무용과의 전통적 분과를 고수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고 이기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로 무용과 논의에서 융복합성이나 학제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예술-과학의 융합이나 혁신적인 학제성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살펴야 한다. 학제성에 대한 긍정은 근대적 학문분과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한다. 오늘날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칸막이 속 학문분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⁷⁹⁾ 그러나 김혜나(2017)는 경직되고 억압적이며 정제된 이미지의 분과학문과 대조되는 유연하고 자유로우며 혁신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학제성은 신화라고 일축한다. 오히려 기술 자본주의를 맹렬히 실현하기 위한 때갈 좋은 구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앤드류 애보트(2002) 역시 학제성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경고한다. 학과는 연구분야 뿐 아니라 학부교육의 커리큘럼 결정 단위이기도 대학에서 대치할 수 없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이다. 또한 학제간 연구의 주제는 주로 문제해결 위주인데, 그 문제들은 수명이 짧아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⁸⁰⁾ 흥미롭게도 애보트는 엘리트 대학이 학문분과나 학과체제를 유지하고 대중적 대학이 학제간 연구, 실용교육,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담당하리라 예측했다. 엘리트 대학이 기초이론과 연구를 담당한다는 것은 학제간 연구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우며 호흡이 길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융복합성과 학제성은 정부나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학 특성화 정책이나 대학 핵심역량에 쉽게 부합할 수 있는 전략이다. 특히 공학을 중심으로 예술학과를 융합하는 방식의 학과개편은 기존의 예술과를 축소할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된다. 대학이 예술계열 학과를 축소하는 전략이 직접적인 방식, 즉 전공생의 반발이 많은 폐과를 강요하기보다는 융합연계전공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앙대학교의 ‘학사구조 선진화방안’은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학과의 벽을 허물고 단과대학 단위로 전공을 운영하는 학사제도”라는 명목 하에 각기 예술적 전통이 있는 학과인 무용과, 사진학과, 문예창작과를 공연영상창작학부로 통합했다.⁸¹⁾ 이렇게 볼 때 무용과의 입장에서 융복합이나 학제성의 이념이 단기적으로는 존립을 보장받고 이념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무용과가 지향해 온 가치와 목표가 희석되고 존립기반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오랫동안 체육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노력했던 무용과의 역사를 고려할 때 타 전공과의 연계는 매력적인 만큼 위험부담이 따른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에서 체육 교과로부터의 독립을 수년관 추진해 온 상황에서 융합의 파장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용과가 적극 받아들이는 학제성이 실은 매우 편협함도 지적할 수 있다. 기존 무용과가 실용무용 분야로 확장했을 때 높은 경쟁률을 취할 뿐 아니라 평생교육원 및 사회교육원 등의 형태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⁸²⁾ 폐과 위기에 몰린 지

79) 에드워드 윌슨가 제시한 『Consilience』(1998)를 우리나라에선 최재천이 “통섭, 지식의 대통합”으로 번역하여 학제간 연구의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미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에서 학제간 연구가 중요하다는 논평은 1934년에 발표될 정도로 학제간 연구의 개념은 학문 분과의 정립과 동시에 생겼다.

80) Andrew Abbott(2002), *The Disciplines and the Future, The Future of the City of Intellect: The Changing American University*, Steven Brint(ed.)(Stanford University Press) (오세정(2009), 미래에 우리는 어디에서 공부할 것인가,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재인용), pp.308-313.

81) 이동연(2015), 신자유주의 대학과 학력자본의 재생산, 『문화과학』 82, pp.12-38.

방 무용과는 실용무용, 생활무용을 받아들이지만 수도권의 무용과에선 아직 외면하는 까닭은 순수무용/실용무용의 이분법적 위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기존 무용과와 가까운 영역은 정작 외면한 채 모호하고 추상적인 공학과의 융합은 쫓는 위선적인 입장은 무용과의 미래지향적인 전망이 실은 학과의 역사 및 이해타산과 얽혀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미국의 경우도 대학 무용교육의 담론을 개인 무용스튜디오나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상업무용 및 대중무용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⁸³⁾

나아가 융합학과나 융복합 연계전공 제도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 설계가 지닌 경직성과 획일성 외에도 인력의 초과공급, 시류를 타는 융합전공의 짧은 유효성, 그리고 나열식 융합이 지닌 깊이의 결여 등은 모두 정부가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서 역행한다(박진완, 2018). 이러한 상황에서 무용과의 담론은 지금까지 대학무용교육이 구축해 온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부정하고 기술공학 계열과의 연계를 만병통치약으로 삼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V. 제 언

4차 산업혁명의 대두 이후 무용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은 무용계 내 각종 학회, 협회, 연구소, 조합, 학회지 등의 세분화된 칸막이 속에서 제대로 된 파장과 반향을 얻지 못한 채 소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대학의 기술자본 담론을 살펴보고, 대학 무용과의 위기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무용과 위주의 관점을 고등무용교육으로 확장하며, 특히 시류에 편승하거나 뒤쫓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주체적이고도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무용과의 위기는 실체가 있는가? 대학구조조정이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부적 상황 속에 무용과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안으로부터의 변화, 체질적인 변화를 유도해야함을 제안한다.

첫째, 무용계의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주체와 입장에 따라 위기의 정도와 영향이 다르기에 기존의 질서와 관습에서 벗어나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자세와 기회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선 미국무용계에서 구성된 DANCE 2050의 사례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정보화, 세계화, 무용인구 변화 등 다양한 사회변혁 속 무용교육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2012년에 시작된 DANCE 2050은 개인의 연구물을 발표하는 여느 학술대회와는 달리 무용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사흘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기 연구물을 발표하고 실적을 쌓는 기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화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것이다. 2012년 첫 해의 학회에 직접 참가했던 연구자는 무용학자들이 둘러앉아 움직임을 행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를 섬세하게 연결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목도했다. 외국인 박사과정생이던 본 연구자부터 은퇴를 앞둔 교수, 현장의 무용교사들에 이르기

82) 최경희(2017), 대학 무용(학)과 및 무용 전공의 변화와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3), pp.23-42.

83) Doug Risner(2010), Dance Education Matters: Rebuilding Postsecondary Dance Education for Twenty-First Century Relevance and Resonance, *Journal of Dance Education* 10(4), pp.95-110.

까지 다양한 주체가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소통하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의 논의를 쌓아가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주체의 동등한 소통, 현장으로부터의 관찰과 제언, 그리고 수많은 목소리를 정교하게 엮은 결과물이 가진 힘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한다. 그 결과물인 “Vision document for Dance 2050: The future of dance in higher education”⁸⁴⁾는 우리나라 고등무용교육에서 참고할 사례로 제시되지만 우리 무용계가 진실로 참고해야 할 부분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시적이고 거창한 변혁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는 학생들에게 순종적인 모범생이 될 것을 요구하다가 취업 때는 갑자기 창의적인 인재일 것을 요구하지만, 취업 후에는 다시금 순종적인 노동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는 농담이 있다. 이처럼 창의력은 손쉽게, 편리하게,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일방적인 방식으로 무용을 배워 엄격한 따라하기 입시시험을 통과한 무용과 학생들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키우려면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수많은 노력과 실험이 따라야 한다. 물론 선발과정부터 교육, 진로까지 일관성 있게 변화되어야 하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찾기가 어렵다. 시류에 따라 무용과에도 새로운 전공, 학과, 교과목 등장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은 가시화되지 않고 계량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화는 개인 교수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또한 이벤트처럼 주어지는 진로설계 및 창의취업 특강 한두 번으로 명분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교수-학생간의 일방적인 관계나 각 전공, 이해단체 간의 칸막이와 울타리 속에선 창의성은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무용과의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틀을 강요하면서 많은 탈락자를 양성하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문해보아야 한다.⁸⁵⁾

셋째, 궁극적으로 무용교육, 고등무용교육과 대학 무용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무용과 위주로 무용계가 형성되고 큰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고등무용교육을 꼭 무용과라는 형식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무용학자 더그 리즈너는 ‘중등 교육 이후(post-secondary)’ 무용교육이 대학 무용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기관 및 실천현장을 적극적으로 포괄하고 상호작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대학 무용과가 공연예술에만 집중하고 무용교육은 K-12 자격증에만 한정되는 상황에 경계하며, 상업적 무용스튜디오나 공동체와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⁸⁶⁾ 무용과의 존립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라 고등무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바탕일 뿐이다. 급진적으로는 무용과 제도를 벗어난 무용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고민해봐야 한다. 사회적 의제가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크게 휘둘리는 점은 무용과의 존립 기반이 허약함을 방증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교육이 희망이라고 하지만⁸⁷⁾ 대학이 희망인 것은 아니다. 대학의 권위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대학을 무수한 선택 중 하나로 바꾸어 놓았다. 대학 자체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며, 학생은 관습적인 전공선택과 진학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무용과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교수방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강조하는 창의성과 역량을 갖추기 어려울

84) Lynnette Young Overby et al.(2015), Vision document for Dance 2050: The future of dance in higher education, NDEO Reports, pp.83-84, Published online, <http://www.ndeo.org/content.aspx?page_id=22&club_id=893257&module_id=172476>, 2018. 5. 30.>.

85) 이현정 외(2017), 경계선 위의 삶: 무용하지 않는 무용학과 여대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5), pp.175-200.

86) Doug Risner(2010), pp.98-100.

87) 류태호(2017),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뿐만 아니라 충분하지도 않다. 미국 무용교육협회인 NDEO의 온라인 교육 코스인 Online Professional Development InstituteTM(OPDI), 한국에서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러시아 바가노바학교의 교사 자격증, 다양한 영역의 전문 자격증 연수와 새로운 교육 플랫폼의 대두 등을 볼 때 무용전공자가 굳이 국내 대학 무용과에 진학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대학의 무용과가 미래에도 유의미한 고등무용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려면 현재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철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 김창인(2015). 『괴물이 된 대학: 자본의 꼭두각시가 된 한국 대학 구조조정 백서』. 서울: 시대의창.
- 나민주(2005). 『시장·정부·대학: 대학재정지원정책의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도너휴, 프랭크(2008). 『최후의 교수들: 영리형 대학 시대에 인문학하기』. 차익중(역). 서울: 일월서각, 2014.
- 류태호(2017).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레딩스, 빌(1996). 『폐허의 대학』. 윤지관 · 김영희(역). 서울: 책과 함께, 2015.
- 손화철 외(2017).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서울: 북바이북.
- 오세정(2009). 미래에 우리는 어디에서 공부할 것인가.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김광웅(편). 서울: 생각의 나무.
- 오현석 · 유상옥(2015). 미래인재의 조건. 『교육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김동일(편). 학지사.
- 헤이버, 조너선(2014). 『무크: 대학의 미래를 뒤바꿀 학습 혁명』. 김형률(역). 파주: 돌베개, 2016.
- 홍성욱 외(2017).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우리는 왜 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가』. 서울: 휴머니스트.
- 홍정민(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 에듀테크』. 서울: 책밥.
- Donaldson, J. et al.(2013). 『전세계 온라인 공개강좌의 충격 MOOC』. 손경아, 김병호, 곽노섭(역). 서울: 홍릉과학출판사, 2015.
- 고경희 · 백현순(2013). 대학 무용학과의 미래전망. 『한국무용연구』, 31(3): 23-40.
- 김경숙 · 박수경(1997). 대학 무용(학)과 교과과정 개발을 한 기초조사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1: 5-17.
- 김성열(2017).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혁신: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pp. 5-27.
- 김세직 · 정운찬(2007).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적 인적자본과 이를 위한 교육개혁. 『경제논집』, 46(4): 187-214.
- 김영옥(2007). 대학무용과의 교육과정과 취업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지』, 53: 23-37.
- 김운미(2015). 고령화시대 무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무용학과 교육현황과 무용평가제도의 문제 고찰: 무용학과 입시 전형과 관련 무용 경연 대회를 중심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 29: 27-68.
- 김보미(2017). NCS에서 바라본 대학무용계열학과 무용교육 교육과정 분석.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2): 185-201.
- 김태성(2017).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해설: 대학 및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8(3): 333-353.
- 김혜나(2017). 대학의 융합 시나리오와 그 딜레마. 『인문논총』, 74(4): 415-440.
- 나경아 · 한석진(2015). 대학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과정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56(5): 39-56.

- 남수정(2002). 무용 예술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에 관한 소고. 『한국무용기록학회지』, 3: 5-20.
- 남수정(2011). 학부제 하에서의 대학무용 현황 및 운영특성 분석.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3: 1-17.
- 맹미선(2017). 알파고 쇼크와 ‘4차 산업혁명’ 담론의 확산: 과학기술 유행어의 수사적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가열 외(2016).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박기선(2003). 무용전공 대학생의 취업인식도 및 교과과정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희·조남용(2009). 진로 교육 측면에 살펴본 무용관련학과의 교육과정 현황과 대안적 방향 탐색. 『한국무용과학학회지』, 19: 1-12.
- 박진완(2017). 예술전공의 구조조정과 융합교육시스템의 개편 과정에 관한 고찰. 『한국예술연구소 201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45-65.
- 박현정(2015). 무용과 졸업생의 취업준비과정 및 직업만족도 분석. 『무용역사기록학』, 37: 81-99.
- 변기용·이석열·라은중(2017).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체제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35(5): 275-302.
- 배귀영(2003). 대학무용학과의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연구. 『경남 체육연구』, 8(2): 29-40.
- 배수을(2016). 사회수요 맞춤형 무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방안. 『무용예술학연구』, 59(2): 1-19.
- 신민혜(2015). 진로확대를 위한 역량중심의 무용학과 교과과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민혜(2016). 진로다양화 및 세분화를 위한 무용학과 진로교육 교과과정 및 운영방안. 『무용예술학연구』, 61(4): 13-27.
- 신민혜(2017). 대학 무용학과의 존립을 위한 선발-교육-진로 방향성 모색. 『무용예술학연구』, 63(1): 67-85.
- 신은경(2004). 21C 대학 무용교육과정을 위한 패러다임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5(2): 113-127.
- 심성보(2017).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의 한계와 향후 과제. 『대학: 담론과 쟁점』, 2: 62-74.
- 오레지나(2013). 대학무용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특성화 방향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2): 1-12.
- 유미희(2009). 한국 무용교육의 변천과 과제: 해방이후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2): 1-27.
- 윤지현(2017). 1960, 1970년대 한국 무용교육 제도의 근대적 이행: 개인무용연구소에서 대학 무용과로. 『무용예술학연구』, 67(5): 1-16.
- 이동연(2015). 신자유주의 대학과 학력자본의 재생산. 『문화과학』, 82: 12-38.
- 이명균(2004). 시장논리에 의한 대학교육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연세교육연구』, 17(1): 139-167.
- 이미희(2014). 무용에서의 테크놀로지 연구동향 분석 및 전망. 『우리춤과 과학기술』, 25: 127-157.

- 이윤정(2017). 변곡점에 선 한국의 대학교육과 4차 산업혁명 - 지식담론에서 교육담론으로의 전환 필요성. 『인문과학연구논총』, 38(2): 141-181
- 이현정 외(2017). 경계선 위의 삶: 무용하지 않는 무용학과 여대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5): 175-200.
- 임수진(2015). 댄스 리터러시 개념 및 교수방법 탐색: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개념틀 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 정강우(2015). 대학무용교육의 시의성과 직무능력 개발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연구』, 33(3): 331-359.
- 정희모(2013). 대학 이념의 변화와 인문학의 미래. 『철학탐구』, 34: 169-193.
- 조상식(2016). 신자유주의시대 대학과 ‘포스트’ 신자유주의 대학정책. 『대학: 담론과 쟁점』, 2: 93-104.
- 조재욱(1998). 무용전공자의 진로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 지역 4개 대학 무용전공학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경희(2017). 대학 무용(학)과 및 무용 전공의 변화와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3): 23-42.
- 최윤선(2012). 시장중심 무용학과 교과과정 모형 개발 제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254-264.
- 최재희(2015). 창의·인성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무용교육의 방향. 『한국체육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47-51.
- 하연섭(2006). 정책아이디어와 제도변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4): 1-27.
- 황인주(200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용교육의 활성화 발전방안. 정보통신부 보고서.
- Risner, Doug(2010). Dance Education Matters: Rebuilding Postsecondary Dance Education for Twenty-First Century Relevance and Resonance. *Journal of Dance Education*, 10(4): 95-110.
- Clyaton, Michell, Mark Franko, Nadine George-Graves, André Lepecki, Susan Manning, Janice Ross, Rebecca Schneider, Noémi Solomon, Stefanie Miller(2013). Inside/Beside Dance Studies: A Conversation Mellon Dance Studies in/and the Humanities. *Dance Research Journal*, 45(3): 5-28.
- 미래창조과학부(2016).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미래창조과학부.
- 강준모(2018).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미래국가전략”. 『4차 산업혁명 전략의 새로운 지평: 미래 국가전략의 모색』.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집.
- 홍형득(2008).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대학의 역할모형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 미국 뉴저지주립대학의 산학연계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자료』.
- Rauhvargers, Andrejs(2011). Global university rankings and their impact. *EUA REPORT ON RANKINGS 2011*. Europe University Association.
- Overby, Lynnette Young et al.(2015). Vision document for Dance 2050: The future of dance in higher education. *NDEO Reports*, pp.83-84, Published online. <<<http://www.ndeo.org/content.aspx?>

page_id=22&club_id=893257&module_id=172476, 2018. 5. 30>

연합뉴스(2017. 2. 3). ‘차기주자 앞 다투어 “4차 산업혁명, 미래 먹거리”’.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03004300038/>>, 2018. 4. 30.>.

이준웅(2017. 5. 7.) ‘4차 산업혁명’ 구호는 버려야, 『경향신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5071542001&code=990100>, 2018. 4. 26.>.

논문투고일 2018. 05. 15

심사일 2018. 05. 20

심사완료일 2018. 05. 31

Technology-Capital Discourse and the Future of Dance in Higher Education

Jeong, Ok Hee
Sungkyunkwan Univ.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come such a buzzword in Korea, and the dance field is no exception for it. Instead of consuming it as another slogan to absorb, this study takes a critical and contextualized approach to it in the light of the future of dance in higher education. Shifting the framework from topic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ance departments’ into those of ‘technology-capital discourse’ and ‘dance in higher education’, the researcher argues that the dance field should problematize the paradox found in the logics of university reconfiguration, conceptualize dance in higher education beyond the boundary of departmental structures, and build an arena in which disparate subjects can share with each other and envision the future of our field.

Keyword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차 산업혁명), Dance department(무용과), Technology-capital discourse(기술자본 담론), Dance in higher education(고등무용교육), Technological determinism(기술결정주의)